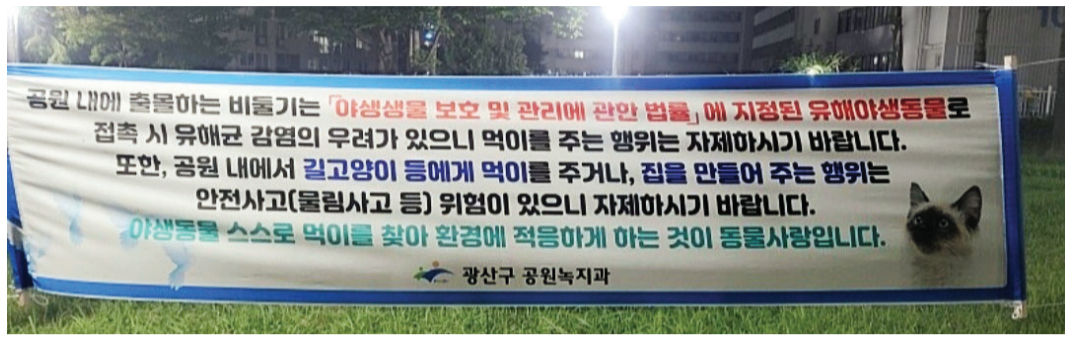


“공존의 대상” 해묵은 ‘길고양이 논란’ 재점화 “귀찮은 존재”

지자체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 동물단체·애묘인 항의로 철거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 조절” “캣맘이 데려다 키우면 될 것” 캣맘-주민간 갈등도 ‘진행형’



광주시 광산구 한 공원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왼쪽)이 지난해 8월 걸렸지만 민원이 이어지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변경했다. <독자 제공>



광주시 서구가 최근 근린공원 곳곳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동물단체와 애묘인들이 항의하자 이틀만에 철거했다. 길고양이와 관련 "밥 주겠다", "안 된다"는 해묵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공공영역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구는 근린공원 곳곳에 '공원 내 길고양이 먹이를 주거나 놓아두지 마세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동물단체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자체에 항의했지만 서구 담당자는 '문제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서구의 답변은 달라졌다. 담당자가 법령을 확대해석했다는 것이다. 서구는 "담당자가 도시공원 관계법령상 '공원에 오물 또는 폐기물을 버리면 안된다'는 규정을 보고

사료가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될 수 있고 길고양이가 배변을 볼 경우 오물이 생긴다고 판단해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결국 이틀만에 예산을 들여 제작한 현수막은 모두 내려졌다. 지자체 행정유류는 서구만이 아니었다. 광산구도 지난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민원이 급증하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라는 현수막으로 고쳐 게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거나 유기된 상태로 길거리와 들에서 살아가는 고양이의 사료를 정기적으로 챙겨주는 일명 '캣맘'에 대한 논란은 광주지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시 동구 무등산 아이파크에서는 최근 길고양이 먹이 문제로 입주자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



년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밥을 주던 캣맘 입주주민들과 일부 반대 입장을 가진 입주주민간의 문제다. 캣맘 입주주민들은 4년 전부터 이곳에 사는 고양이 10마리에게 밥과 겨울을 지낼 집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 '아파트 내 길냥이 먹이 주기 절대금지' 현수막이 단지 내 붙여지면서 문제

가 커졌다. 결국 논란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넘어갔지만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5일 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홍보를 선전 방식을 두고 다시 입장차이가 발생해 투표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 길고양이 급식문제는 해묵은 주민갈등이다. 먹이를 주면 안된다는 주민들은 길고양이 울음소리, 배설물, 주차 차량 손과, 쓰레기봉투 해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밥을 줄 거면 배설물도 치워주거나 본인이 키우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주장을 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동물단체나 캣맘 활동을 하는 애묘인들은 선입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TNR(trap-neuter-return·인도적 방법)으로 포획해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것)을 통해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울음 소음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사료를 주면 쓰레기 봉투를 찢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정순 광주시캣맘협의회 대표는 "광주시 차원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 조례로 틀을 잡아준다면 반복되는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TNR 사업으로 동구 220마리, 서구 400마리, 남구 310마리, 북구 370마리, 광산구 310마리 등 1600여마리를 중성화했다. 지난 2016년부터 광주시가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도 10곳(서구 6곳, 남구 4곳)이다. 시는 지난 11월 공원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내용을 담은 동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공원관련 부서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의회, 5·18 왜곡 대응 사업비 66% 삭감

힌즈페터 국제보도상·상설음악회 등 삭감은 '없던 일로'

광주시의회가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왜곡대응 지원'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했다. 내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 반발이 확산하자(광주일보 12월 12일자 6면) 대부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했으나, 핵심현안인 왜곡 대응 사업은 대폭 삭감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인권평화국 예산안 최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예고했던 힌즈페터 국제보도상(1억 7500만원)은 원안이 반영됐다. 오월의노래 상설음악회(8000만원)와 5·18역사체

험프로그램(3300만원)도 원안 수용됐다. 하지만 5·18기념재단에 교부될 역사왜곡 대응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은 66.7%를 감액한 4650만원만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법률대응비는 2023년도 예산 대비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는 30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감액됐다. 오월의노래(오월지기) 활동비는 4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삭감됐다. 오월지기를 안내·배정·접수하는 직원 활동비 3500만원, 강의 등을 통한 진실알리기 활동비 2000만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 6400만원은 아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안팎에서는 '왜곡 대응 사업이 불가능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왜곡대응 사업'을 통해 5·18기념재단이 인건비를 편법으로 주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깎았는데, 애초 5·18기념재단은 국비를 통해 사업비 외 인건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시비 사업비를 받아 일부 직원의 임금을 주고 있던 것"이라며 "인건비 구조를 이해해 주지 않고 무작정 예산을 깎다 보니 왜곡 대응도 제대로 못 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5·18 왜곡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왜곡 대응을 위한 손발을 다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전남교육청, 내년 3월부터 학생교육수당 지급

지역 소멸 위기 16개 시·군 초등생 1인당 월 10만원

전남교육청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예산 521억원은 이날 전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 교육청은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시·군(무안군 제외) 초등학생들에게 1인당 매달 10만원을 바우처카드 포인

트로 지급한다.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5만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도 내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 부정적인 보건복지부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호남권 고속도로 화물차 10대 중 6대 '불법'

1~11월 안전판 미부착·불법 개조 등 723건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호남권 고속도로를 운행한 화물차 가운데 64.9%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권 고속도로의 플게이트, 휴게소 등지에서 익산국토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모두 1114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64.9%에 해당하는 723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등화 장치 관련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262건(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뒷면에 반사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228건(20.6%) 적발됐다. 차량 뒷면 안전판을 불량하게 설치한 경우는 124건(11.2%)이었다. 대형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차량 불법 개조도 118건(10.7%) 적발됐으며, 번호판을

잘못 부착한 경우도 79건(7.1%)이었다. 공단은 단속된 차량을 행정조치(과태료·형사고발)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단속 결과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호남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년 합계 108명 중 55명(50.9%)이 화물차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또한 2018년 14명, 2019년 8명,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으로 매년 10여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법열 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개조가 사업용 화물차 중심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운행차 안전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